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1995. 12.

鄭 圭 燮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관계 개선 및 궁극적인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이 그간 추진해 온 대외정책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은 어떠한 양상을 띠는 것인지를 전망하려는 것이다.

1. 對外政策 變遷過程 및 影響要因

국가수립 이후 1954년까지 북한의 외교는 사회주의 진영에 국한된 陣營外交의 양상을 보였으며, 주로 국가승인외교와 戰時外交,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의 획득에 치중되었다. 소련의 후견하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의 국제적인 승인과 원조,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험은 진영외교를 전개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

1955년 2월 25일 “대일관계에 관한 외무상의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외정책 多邊化 論理를 표명한 북한은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접촉을 시작으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 외교 범위를 확대시켰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中·蘇紛爭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 상황

에서 제3세계 국가들로의 진출도 가속화하였다. 당시 소련의 平和共存政策과 제3세계의 등장은 북한이 대외정책 다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국제환경요인이었으며, 김일성의 權力鞏固化, 전후복구 3개년계획 및 제1차 5개년계획을 통해 성취한 북한의 경제력 상승은 이를 뒷받침한 국내환경요인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自主的 立場을 모색하였으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는 북한 대외정책의 제1원칙으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자주노선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준 국제환경요인은 中·蘇紛爭이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 韓·日國交正常化와 베트남전쟁의 확산이라는 地域體系의 變化 등이었다. 김일성 唯一體制의 형성과 軍事力 強化는 국내환경요인이었다.

1970년대 들어 북한은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對外政策의 世界化를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제환경요인은 당시의 미·소대립트를 들 수 있으며, 남한과의 外交的·經濟的 競爭에서의 열세를 탈피하려는 의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국내환경요인으로서는 6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經濟成長의 필요와 技術官僚의 등장에 따른 정치구조의 변화 등이다.

1980년대에 들어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적인 측면은 對外政策 理念의 체계화와 對外開放의 모색이다. 북한은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 이념을 「자주, 친선, 평화」로 체계화하여 공

표한 것과 함께 對外貿易의 확대발전을 강조하였으며,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대외무역의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모색하는 데 영향을 준 국제환경요인은 1978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開放政策이었다. 국내환경요인은 계획경제, 자력갱생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세대교체의 가속화, 엘리트의 역할 분화, 기술관료의 부상 등이었다.

북한은 1988년 남한과의 「공존」을 최초로 표명하는 한편 대미·일 관계정상화 추진,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을 모색하면서 東·西冷戰의 종식,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세계질서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정책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推進 現況

현재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설정된 대외정책 이념 및 노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새로운 정책을 표방하기 보다는 사망한 김일성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훈통치」의 일환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1994년 10월 21일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통해 「미·북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1995년 12

월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대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공급협정을 체결함으로써 對美 직접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대미관계 개선을 가시화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994년 8월 북경에서 일본과 수교교섭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재개한 북한은 1995년 3월 30일 일본 연립3당의 訪北 대표단과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4개조항에 합의하였다. 일·북한은 이후 수교회담과 관련한 몇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일본의 보상문제 등에 대한 양국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인해 關係正常化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한·중 수교 및 중국지도자들의 訪韓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과 同盟關係를 유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노력해 왔다. 중국 역시 북한을 이념적 동조자, 안보를 위한 완충국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북한 공존관계의 유지 차원에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기존의 이념적 유대 및 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탈피하여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 1995년 9월 7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1996년 9월 10일 효력이 만료되는 「러·북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음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한은 과거의 軍事同盟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보편적인 선린관계를 재정립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정 대표단을 서방국가들에 파견하여 친선유대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초청·방문의교를 전개함으로써 이들과의 關係緊密化도 모색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이 일관되게 「통일3원칙」과 「10대강령」을 대남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二重的 對南政策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이 실제 추진한 대남정책은 남한을 배제한 채 대미 직접협상을 통한 체제유지 도모 및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공존 모색과 통일전선전술 강화라는 이중전략 가운데 통일전선전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3.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推進 影響要因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첫째, 정치·이데올로기적 요인으로서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

는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정일 유일체제로 공고화될수록 社會開放이 가속화될 수 있는 대외정책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공식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드러나는 극단적인 反外勢的 論理 역시 효율적인 대외정책의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외 경제개방과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외자유치와 관련한 법령들을 계속 정비하는 등 자구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물자부족 및 병목현상, 기술 및 설비의 낙후, 투자자원 조달능력 결여 등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체제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경제정책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내에 自力에 의한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國際環境要因으로서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日·中·러가 勢力均衡을 이루는 「1+3」體制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안보와 경제의 두 측면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을 포괄하는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한편 주변4국과 북한은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 평화 공존 및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주변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을 원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궁극적인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對外政策 變化 展望

김일성 사후 북한은 지속된 경제침체와 카리스마의 소멸에 따라 체제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김정일 정권이 당면한 핵심 國家目標은 체제의 안정성 확보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김정일 정권은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 안정성 확보 및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대외정책 추진의 실질적인 방향은 첫째, 주변4국과의 관계 긴밀화이며, 북한은 대미·일관계 진전 및 중·러 우호관계 증진에 의한 국제적 고립 탈피, 對南劣勢 회복 및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두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제외교의 활성화이다. 북한이 처한 經濟難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김정일 정권은 경제외교를 보다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추진할 경제외교의 주된 방향은 인접국가로부터의 경제원조 확보, 유럽국가들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이중적 대남정책의 지속으로 북한이 기존 대남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수령론」에 입각한 김정일 유일체제의 성격 및 「통일」이라는 명제가 북한체제의 결속 및 존립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군사문제에 있어서는 남한을 배제하면서도 제한된 개방지역에 남한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도모하는 등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함으로써 ①경제적 실익 획득, ②대미·일 관계개선의 조건 충족, ③남한 배제전략 지속 등을 거양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남북공존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5. 結 論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은 기존 정책을 답습하면서도 대미·일 관계개선의 가속화 및 경제외교의 활성화라는 특징을 보이는 한편 남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에 따라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外交面에서는 한국의 국내외적 역량 및 위상 강화라는 핵심적 국가이익 확보에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경제마찰을 해소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미·일 등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대미관계의 기본틀을 견지하면서 대일·중·러 관계발전을 모색함으로써 「1+3 체제」에 상응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安保面에서는 신국제질서에 부응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안보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反共理念 퇴색에 따른 가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한다. 한·미 안보유대의 기본틀을 견지하면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변4국은 이미 탈냉전 차원에서 남북한에 대한 均衡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국제정치적 역할을 인정하고 대미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북한이 매개된 3각구도가 아니라 쌍무관계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일의 대북한 관계진전을 활용하여 북한체제 변화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미·일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目 次 -

第I章 序論	1
第II章 變遷過程 및 現況	4
1. 變遷過程 및 影響要因	4
가. 陣營外交	4
나. 對外政策의 多邊化	5
다. 自主路線의 樹立	8
라. 對外政策의 世界化	11
마. 對外政策 理念의 體系化와 對外開放의 摸索	15
바. 世界秩序 變化에의 적용	20
2. 現況	30
가. 對外政策 理念 및 路線	30
나. 政策推進 現況	38

第Ⅲ章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55
1. 政策推進 影響要因	55
가. 政治·이데올로기적 요인	55
나. 經濟的 要因	63
다. 國際環境要因	67
2. 政策變化 展望	75
가. 政策目標 및 路線	75
나. 政策推進 方向	77
第Ⅳ章 結 論	85
參考文獻	88

第 I 章 序 論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국가주석 및 당총비서직은 공석으로 있지만,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인 김정일이 실질적인 最高指導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라는 카리스마의 소멸 이후 북한 정권의 최대 목표와 대내외정책의 초점은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體制安定性의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새로운 정책을 표방하기 보다는 사망한 김일성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遺訓統治」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 「유훈교시」의 핵심 내용을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김정일 유일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¹⁾

김일성의 유훈에 따른 통치는 김일성 생존시 북한이 추진해 온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의미한다. 현재 김정일 체제는 급격한 정책전환을 시도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적어도 1996년 말로 설정된 완충기를 통해 체제안정성을 확보할 만한 성과를 달성할 때까지는 遺訓統治를 지속하면서 기존 정

1)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 이틀전인 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행한 교시가 「유훈교시」라고 설명하고, 이를 관철하는 사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더없이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5년 7월 6일 사설.

책의 점진적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4년 10월 21일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통해 「미·북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1995년 12월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대북한 경수로지원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공급협상을 체결함으로써 對美 직접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대미 관계개선을 가시화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5년 3월 중단되었던 일본과의 국교정상화협상의 재개에 합의하는 한편, 유럽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經濟外交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95년 여름 남한의 대북한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南北對話를 거부한 채 대남비방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미·일 국교정상화 추진, 대중·러 관계 재정립 등 대외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한반도 정세 및 통일환경은 현재와는 상이한 양태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 개선 및 궁극적인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이 그간 추진해 온 대외정책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은 어떠한 양상을 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정권수립 이후 북한이

전개해 온 대외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정책변화의 影響要因을 개관한 후, 김일성 사망 이후의 대외정책 이념 및 정책추진 현황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인 要因들을 분석한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정치구조, 경제력, 군사력, 이데올로기, 역사적 경험 등 국내환경요인과 세계체제, 지역체제 등 국제환경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성 및 북한이 처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 가운데 일부 요인만을 검토하려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향요인 및 대외정책 추진 현황에 입각하여 향후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推進方向을 전망한다.

본 연구의 結論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을 감안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Ⅱ章 變遷過程 및 現況

1. 變遷過程 및 影響要因

가. 陣營外交

북한의 외교는 국가수립 이후 1954년까지의 기간에는 사회주의 진영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으며, 김일성이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政府政綱에서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이 최초로 표명되었다.²⁾ 이 기간 북한의 외교는 주로 국가승인외교와 戰時外交,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 획득에 치중되어 전개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후견하에 사회주의 진영내에서 합법적인 外交的 承認을 획득하고, 한국전쟁시에는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지원 획득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중에 만행을 자행했다는 대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³⁾ 한국전쟁 이후 북한 대외정책의 초

2) 이 政府政綱에서 제시된 대외정책 방향은 독립국가로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과 일본에 적대적인 태도의 표명이다.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 194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46 참조.

3)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국가들의 對北韓 支援에 대한 내용은 김일성이 1953년 12월 20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회의에서 행한 “쏘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 보고문의 전문은 「조선중앙년감 1954-55」, pp. 19~29;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점은 정전회담,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획득, 판문점 정치회의와 제네바회의에 있었다.

韓國戰爭 기간의 「역사적 경험」은 북한이 자주노선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에 대한 敵對政策을 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의 국제적인 승인과 원조는 북한 대외정책의 원칙 가운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상존시키는 요인이었다.

나. 對外政策의 多邊化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대외정책 多邊化의 論理가 최초로 표명된 것은 1955년 2월 25일에 발표된 “대일관계에 관한 외무상의 성명”이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으며 우선 호상리익에 부합되는 무역

資料集, 第 I 輯」(서울: 國土統一院, 1988), pp. 617~640 참조.

한편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對外宣傳 내용에 대해서는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430~433;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80~109 참조.

관계와 문화연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는 점을 밝히고, 일본과의 關係正常化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⁴⁾ 이러한 다변화의 논리는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 등에서 김일성이 행한 보고문, 연설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북한이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첫번째 대상은 일본이었으며, 북한은 1955년부터 인도, 인도네시아와 접촉을 시작하여 점차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 범위를 확대시켰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남한에 대해서는 平和統一을 표방하며, 군대축소, 국제회의 소집, 연방제 통일방안, 경제문화교류, 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對南政策을 추구하였다.⁵⁾ 1961년 이후 북한은 中蘇紛爭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로의 진출을 가속화하였다.⁶⁾

4) 「조선중앙년감 1956」, p. 16.

5) 이 시기 북한의 주요 對南提議는 제3차 당대회, 195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회의, 1957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 1959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 1960년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196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6) 1958년부터 1965년까지 북한은 알제리(1958.9.25), 기니아(1958.10.8), 쿠바(1960.8.20), 말리(1960.10.31), 우간다(1963.3.2), 북예멘(1963.3.9), 이집트(1963.8.24), 인도네시아(1964.4.16), 모리타니아(1964.11.11), 캄보디아(1964.12.20), 콩고(1964.12.24), 가나(1964.12.28), 탄자니아

북한이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전개하는 데 영향을 준 국제환경적 요인은 소련의 平和共存政策과 제3세계의 등장이었다. 북한은 스탈린(Joseph Stalin) 사후 전개된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여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⁷⁾ 또한 1955년 4월 개최된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이후 1961년 9월 제1차 비동맹정상회의 개최 등 비동맹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1960년대에 들어 新生獨立國家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표방하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서구적 입장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북한은 이들과의 관계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⁸⁾ 결국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제3세계의 등장에 따라 북한은 대외정책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1965.1.13) 등 13개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 7) 북한이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의 평화공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구체적인 내용은 鄭鎮潤, 「北方三角關係: 北韓의 對中-蘇關係를 中心으로」(서울: 法文社, 1985), pp. 50~53 참조. 북한은 1958년 9월부터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에서 「레닌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평화적 공존원칙」으로 표기하였다.
- 8) 북한이 대외정책의 多邊化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의 하나가 제3세계 국가들의 등장이었다는 점은 「조선전사」의 다음 기술내용에서 알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하며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1960년대 전반기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0」(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430.

이와 함께 1958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성립된 김일성의 權力鞏固化,⁹⁾ 전후복구 3개년계획 및 제1차 5개년계획을 통해 성취한 북한의 경제력 상승은 다변대외정책의 효율적인 전개를 뒷받침한 국내환경적 요인이었다. 특히 북한은 經濟力을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제발전 모델을 신생독립국가에게 부각시키면서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¹⁰⁾

다. 自主路線의 樹立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 다변대외정책의 전개와 함께 대외관계에서 自主的 立場을 모색해 왔다. 김일성은 1962년 10월 23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에

9) 김일성은 1961년 제4차 당대회와 보고에서 “특히 당은 1956년 8월의 전원회의와 1958년 3월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당내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라고 지적인 점에서 김일성의 권력공고화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조선중앙년감 1962』, p. 45;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p. 561.

10)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9), p. 167. 이 시기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평가는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pp. 156~161 참조.

서 사회주의 국가간의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주장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관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두다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간에 서로 존중하며 지지합니다. 이 나라들 사이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그 나라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¹¹⁾

이후 북한은 일련의 「로동신문」 사설과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自主路線을 거듭 표명하였고,¹²⁾ 1966년 10월에 개최된 당 대표자회에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自主權과 平等權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자주노선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¹³⁾ 북한은 1967년 12월에 발표한 政府政綱을 통해 자주노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¹⁴⁾ 自主路線의 樹立으로 주체사상의 체계

11) 「조선중앙년감 1963」, pp. 38~39;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I輯」, p. 1175.

12) 구체적인 예는 1963년 1월 30일자, 1963년 10월 28일자,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과 1965년 4월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연설, 1965년 10월 당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의 연설 등이다.

13)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중앙년감 1966-67」, pp. 100~130 참조.

가 완성되었고, 이후부터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공식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자주」는 북한 대외정책의 제1원칙으로 지속되고 있다.¹⁵⁾ 북한이 자주노선을 선포한 이후 대외정책 분야에서 「자주」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對南強硬政策의 전개와 反美鬭爭이라는 슬로건을 강화시킨 것이다.¹⁶⁾

북한이 자주노선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준 결정적인 요인은 中·蘇紛爭이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었다.¹⁷⁾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제공하였다. 중소분쟁

-
- 14)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중앙년감 1968」, pp. 1~29.
- 15) 「자주」에 대한 북한의 개념정의는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430;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764~765;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58 참조.
- 16) 이 시기에 북한의 對南 顛覆活動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Rinn-Sup Shinn, “Foreign and Reunification Policies,”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I (January/February 1973), pp. 60~62 참조. 1968년 1월 23일의 푸에블로 (Pueblo)호 나포사건과 1969년 4월 15일 EC-121기 격추사건 등은 소련의 사전양해 없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arry Gelman and Norman Levin, *The Future of Soviet-North Korean Relations* (Santa Monica: Rand, 1984), p. 18; B. C. Koh,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IX, no. 4 (April 1969), pp. 264~280.
- 17)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20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0」, p. 437.

은 자주노선 수립의 기회가 되었으나, 실리적인 면에서는 제약이 되었다. 북한은 韓·日國交正常化와 베트남전쟁의 확산이라는 地域體系의 變化에 의해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판단되며, 이는 자주노선 수립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북한이 자주노선을 수립하는 과정은 김일성 唯一體制의 형성과 연관되고, 軍事力 強化는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자주를 선포할 수 있는 국내환경이었다.¹⁸⁾ 해방 이후 북한이 중소 양국으로부터 받아 온 내정간섭은 자주노선을 선포하게 된 역사적 경험이었다. 내정간섭의 배제가 곧 자주노선의 수립으로 표출된 것이다.¹⁹⁾ 특히 1966년 8월 12일자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제하의 「로동신문」 사실을 통해 敎條主義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자주노선이 중국과의 쌍방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표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 對外政策의 世界化

북한은 1970년대 들어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과 협조관계

-
- 18) 김일성 유일체제의 형성과 자주노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선 중앙년감 1969」, p. 120 참조. 북한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을 채택한 후 1964년 2월부터 4대 군사노선에 따른 군사력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 19) 「로동신문」, 1963년 10월 28일; 1966년 8월 12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348.

를 발전시킨다는 對外政策의 「世界化」를 시도하였다.²⁰⁾ 북한이 구체적으로 대외정책의 세계화에 대한 논리를 표명한 것은 1970년대 초 김일성이 외국기자들과 행한 일련의 담화를 통해서이다.²¹⁾ 이러한 정책변화는 김일성이 1971년 11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보고함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²²⁾ 북한의 대외정책의 세계화 논리는 김일성이 1972년 12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 체계화되어 표명되었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20) 1970년대 북한 대외정책의 특징을 세계화(globalization)로 간주하는 견해는 Samuel S. Kim, “Pyongyang, the Third World, and Global Politics,” *Korea & World Affairs*, vol. 3, no. 4 (Winter 1979), pp. 439~462 참조.

21) 김일성은 1971년 9월 25일, 10월 8일, 1972년 1월 10일, 9월 17일 일 본기자와의 담화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관계의 도모의지를 표명하였다.

22) 「조선중앙년감 1972」, pp. 279~231; 「정치사전」, pp. 842~843; 統一院, 「北韓概要 '91」 (서울: 統一院, 1990), p. 354.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더 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²³⁾

이와 함께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6조는 북한이 추구한 대외정책 노선의 세계화 논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自主性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단결의 강화, 반제 반미투쟁 강화,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지지, 反帝力量과의 연대성 강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추구되었다. 대외정책의 세계화를 추진한 결과 북한은 제5차 당대회 이후 제6차 당대회까지 66개국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결실을 얻었다. 북한이 대외정책의 세계화라는 논리에

23)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중앙년간 1973」, pp. 28~29.

입각하여 추진한 실제 정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관계개선과 서방으로부터의 플랜트 수입, 차관 도입 등 경제관계의 확대, 유엔주재 상주대표부의 개설과 유엔 산하기구에의 가입, 미국에 대한 직접접촉의 제의, 南北對話, 비동맹운동과 77그룹에의 가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대외정책의 세계화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국내 환경적 요인은 군사력 강화보다 經濟成長을 촉진해야 하는 필요에 따른 技術官僚의 등장이라는 政治構造의 변화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공포된 6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이었다.²⁴⁾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對外經濟交流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세계화라는 논리를 산출하였다. 1969년부터 미·소데탕트가 이루어진 국제환경은 북한의 정책전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북한은 미-중국 데탕트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여 駐韓美軍 철수의 실현, 대외적으로 국가지위와 이미지의 증진,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과 상품의 도입 등을 도모하면서 남북한간의 직접접촉과 외교활동의 급속한 활성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세계화를 추진

24) 제5차 당대회에서 개편된 북한의 權力構造에 대한 분석은 Lee and Scalapino, *Communism in Korea, Part I*, pp. 661~664; Suh, *Kim Il Sung*, pp. 246~247 참조. 6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조선중앙년감 1971」, pp. 16~21 참조.

하였다.²⁵⁾ 이에 는 남한과의 外交的·經濟的 競爭에서 열세에 처한 상황을 탈피하려는 의지도 작용하였다.²⁶⁾

마. 對外政策 理念의 體系化와 對外開放의 摸索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과정에서 1980년대에 들어 가장 특이적인 측면은 對外政策 理念이 체계화된 것과 對外開放政策을 모색·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무역의 확대발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와 함께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자주, 친선, 평화」로 체계화하여 공표하였다.²⁷⁾

-
- 25) Chong-Sik Lee, "New Paths for North Korea,"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VI, no. 2 (March/April 1977), p. 56; Chong-Sik Lee, "The Impact of the Sino-American Detente on Korea," in Gene T. Hisao, ed., *Sino-American Deten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Praeger, 1974), pp. 189~206.
- 26) 1970년 말 현재 남북한의 수교국 수는 각각 83:36이었고,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도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 11~12; Lee, "New Paths for North Korea," p. 56.
- 2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중앙년감 1981」, pp. 28~76 참조. 자주·친선·평화라는 대외정책 이념에 대한 북한의 해석에 대해서는 정동욱,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근로자」, 제526호 (1986년 2월), pp. 88~92; 고성순, "자주, 친선, 평화는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의 기본리념," 「근로자」, 제538호 (1987년 2월), pp. 92

북한은 1966년 자주노선의 수립 이후 대외관계에서 「자주」를 확고히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親善이라는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단 북한 대외정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非同盟 國家들이 분열양상을 보임으로써 실질적인 國家利益의 향상은 미약한 것이었다.

북한은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 이념을 체계화하여 제시한 것과 함께 對外貿易의 확대발전을 강조하였다. 198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채택하여 대외무역의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²⁸⁾ 북한은 經濟合作과 技術協調의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외국인인 직접투자,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²⁹⁾ 북한은 1985년 3월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소득세법을, 5월에는 합

~96 참조.

28) 「조선중앙년감 1985」, p. 124; 이 최고인민회의 결정의 전문은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p. 589~597 참조.

29) Young Whan Kihl, "North Korea's New Pragmatism," *Current History*, vol. 85, no. 510 (April 1986), pp. 164~165; 김영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의 규제내용과 특징," 「사회과학」(1985년 제6호), pp. 41~46 참조.

영회사 소득세법세칙, 외국인 소득세법세칙 등을 각각 제정하여 對外開放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³⁰⁾ 김일성은 1985년 6월 9일 「世界」誌 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합영법 제정의 意義와 앞으로의 경제합작과 교류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나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채택하고 공업과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합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우리나라와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환영할 것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³¹⁾

30)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 no. 12 (December 1988), pp. 1272~1273;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화정책,"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57~258 참조.

31) 「조선중앙년감 1986」, p. 18.

1987년 4월에 채택된 제3차 7개년계획에는 대외무역의 확대와 경제합작, 합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³²⁾ 김일성은 1988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기념식에서의 보고에서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³³⁾라고 말하여 대외무역의 확대, 합영, 합작사업의 확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自立經濟가 결코 폐쇄적인 자력갱생 원칙의 고수가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³⁴⁾ 결국 북한은 對外經濟關係의 확대로 나타나는 대외개방의 논리를 이미 구축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과감히 추진할 수 없는 대내적인 制約要因으로 인해 북한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합영사업을 추진해 온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모색하게 된 근본원인은 계획경제, 자력

32)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법령 전문은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V輯」, pp. 910~924 참조.

33) 「조선중앙년감 1989」, p. 24.

34) 예를 들어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발표한 논문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p. 144.

개방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제2차 7개년계획과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기본과업으로 제시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對外經濟關係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했다. 북한의 經濟狀況은 대외개방의 모색에 핵심적인 影響要因인 것이다.

政治構造의 측면에서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형성된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세대교체의 가속화, 엘리트의 역할분화, 기술관료의 부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³⁵⁾ 특히 技術官僚의 대거 부상은 북한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이후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을 통해 後繼體制를 공고화할 필요성도 있었다. 경제발전을 성취하는 것은 북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였으며, 이를 위해서 대외개방의 모색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결국 북한이 대외개방을 모색하는 데 영향을 준 국내환경 요인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 기술관료의 부상 등이며, 외적 요인은 1978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開放政策으로 분석된다.³⁶⁾

35) 제6차 당대회시 개편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Kim, *Kim Il Sung*, p. 112; Nam-Sik Kim,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An Analysis of the Sixth Congress of the KWP,"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 no. 1 (Spring/Summer 1982), p. 141 참조.

36) 김일성은 1982년 9월 중국방문시 중국이 1978년 12월 제11기 3中全会에서 결정한 대외개방, 경제개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후

바. 世界秩序 변화에의 적응

북한은 1988년에 들어 남한과의 「공존」을 최초로 표명하는 한편, 12월에는 미국과 北京에서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하는 등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1990년 9월 일본과 국교정상화 추진 합의 및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에서 나타나듯이 대미·일 관계정상화 추진, 남북공존 모색,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 추진 등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첫째, 남북공존 모색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빨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³⁷⁾라고 언급하여 해방후 최초로 南北韓 共存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경쟁체제를 共存體制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³⁸⁾ 또한 김일성은 1989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존의 원칙」을 강조하였다.³⁹⁾ 이와 함께 북한은 1988년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정책을 支持하였다.

37) 「로동신문」, 1989년 1월 1일.

38) 이러한 해석은 이정식, “공존과 혁명과 통일논의,”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245 참조.

12월 남한 정부의 總理會談 제의에 호응함으로써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개최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이후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吸收統一을 우려하여 「남북공존」을 수용함으로써 體制維持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9월 유엔 동시가입, 1992년 2월 「기본합의서」 채택·발효 등에 응하면서 남북관계를 조정하였다.⁴⁰⁾

39)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p. 29.

40) 북한은 獨逸이 統一되자 남한에 의해 吸收統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1992년 7월 4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그들은 (남조선당국자) 자주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이 하는 방식으로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에게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라고 지적하여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공존을 모색하면서도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형성」을 강조한 이래 「민족대단결」이라는 명분하에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적극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대남전략은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집약되어 있다.⁴¹⁾

둘째, 북한은 1988년 12월 6일 北京에서 미국과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하였고, 미·북한은 1992년 1월 22일 당비서 김용순과 센터 미국무부 정무차관간에 최초의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核擴散禁止條約(NPT)탈퇴 선언 이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제1단계 미·북한 뉴욕회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2단계 미·북한 제네바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對美 관계개선 理由와 條件은 김일성이 1991년 9월 26일 일본 岩波書店 사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이 대답에서 김일성은 대미 관계개선 노력의 이유를 “미국이 조선의 분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이며 통일 문제 해결이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

41) 「10대강령」에 대한 북한의 자세한 설명은 리순덕,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주체의 민족관을 구현한 조국통일위업의 대강」,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鄭圭燮,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 23~27 참조.

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대미관계 개선의 條件은 “미국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재검토하고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 길로 나간다면”이라는 것이다.⁴²⁾ 또한 김일성은 1992년 4월 12일 *Washington Times*紙 기자단과의 담화를 통해 冷戰 종식에 따라 미·북한 관계개선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사찰 문제와 美軍 유해송환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며, 평양의 미국대사관 개설문제는 미·북한관계 개선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⁴³⁾

美國은 미·북한간 접촉과정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 남북대화의 진전, 미군유해 송환, 反美 적대선전활동 중지, 테러행위 및 폭력 불사용,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의 해외 판매금지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반해 北韓은 미국에 대해 직접대화 및 관계개선, 對北 핵불사용선언,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및 3자회담 개최, 팀스피리트 중지 등을 요구하여 미·북한 관계개선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北韓 核問題가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⁴⁴⁾ 제1, 2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이 개최되는 등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으

42) 「로동신문」, 1991년 11월 11일.

43) 「로동신문」, 1992년 4월 18일.

44) 北韓 核問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ndrew Mack,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XXXIII, no. 4 (April 1993), pp. 339~359 참조.

로 접어들게 되었다.⁴⁵⁾

한편 북한은 1990년 9월 일본 자민당·사회당과 조선로동당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간 國交正常化 추진에 합의한 후 1990년 1월 30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본회담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일본에 대한 接近을 가속화해 왔다. 북한은 “조일국교정상화란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과거사를 옳게 반성총화하고 그 토대우에서 우리나라와 참다운 평등, 호혜의 새로운 선린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조일국교정상화를 해결하는데서 핵을 이루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와 불행과 고통을 준데 대하여 옳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응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⁴⁶⁾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일·북한 수교협상 과정에서 양국간 주요 爭點은 한반도의

45) 제1단계 미·북한 뉴욕회담 결과 양국은 共同發表文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①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불위협, ②핵안전장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전보장 및 상대방의 자주권 상호 존중, 내정불간섭, ③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등 3개 원칙에 합의하고, 이 원칙에 따라 양국 정부는 정당·평등·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NPT 탈퇴 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1993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미·북한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IAEA·북한간, 남북한간, 미·북한간의 새로운 3角 協商構圖가 마련되었다.

46) 「로동신문」, 1992년 2월 3일.

管轄權問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북한의 核査察 수용, 남북관계 개선,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李恩惠 문제 등이었다. 북한은 1992년 중반부터 일본의 핵위협,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정신대 문제 등 과거청산문제를 강도있게 주장하였다. 이는 북한이 對日接近의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7) 북한은 핵문제 해결 및 일·북한 관계개선 속도 문제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판단에서 對美·日 關係改善 우선순위상 대일관계 보다는 대미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對外開放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북한은 1989년 7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北京支社를 통해 83개 합작투자유치 희망사업의 내역을 공개하였으며,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UNDP)국제회의에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안”을 최초로 표명한 이래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 동북아조정관회의에서 「나진·선봉경제지대 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후 北韓은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정

47) 북한이 1992년 9월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연형묵 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과 남이 일본의 과거청산과 핵위협, 해외파병에 공동으로 대처할데 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對日政策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무원 결정 제74호 채택을 공식 발표하여 새로운 段階의 對外開放政策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⁴⁸⁾

이와 함께 북한은 1992년부터 대외개방과 관련한 각종 法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憲法 일부를 수정하여 대외개방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⁴⁹⁾ 1992년 10월 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합작법」 등을 채택·발표함으로써 對外開放을 위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보완하였다. 1993년에 들어 북한은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월 31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0월 24일 「토지임대법」, 11월 24일 「외국투자은행법」, 11월 29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12월 30일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등 7개의 법령을 제정하였다.⁵⁰⁾ 대외개방을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북한은 1992년 이후 일본, 동남아,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외자유치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48) 「內外通信」, 第777號 (1992.1.1).

49) 개정 헌법 제16조는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병과 합작을 장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0) 「內外通信」, 第879號 (1993.12.23); 第880號 (1993.12.30) 참조.

또한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2~3년의 완충기 동안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수출품생산기지 확충, 수출품생산 확대강화, 대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대외무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겠다는 정책방향을 공표하였다.

이와 같이 대미·일 관계정상화 추진, 남북공존 모색,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 추진 등 1980년대 후반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국제환경, 남북한관계, 국내환경 등의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1985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에 따라 초래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體制變動, 1989년 12월 미·소 몰타정상회담 이후 脫冷戰時代(post-Cold War Era)의 도래, 한국의 北方政策 추진에 따른 한·소, 한·중 수교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와해를 초래하여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政治變革을 “제국주의자들에 현혹된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對美·日 接近을 시도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해야만 했다.

둘째, 북한의 외교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남한과의 경쟁이었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 초 남한과의 외교·경제부문 경쟁에서 뒤지기 시작하였으며, 군사부문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國家的一體性 확보라는 측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능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體制競爭에서 뒤진 결과 「하나의 조선」 정책에 대한 자신감 상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우려 등에 따라 체제유지를 위해 「두개 조선」이라는 韓半島 現狀認定의 현실적인 수단으로 대미·일 접근 및 남북관계 재조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된다.

셋째, 북한은 북한체제의 최대 위협요인인 국내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인식과 政治體制의 잠재적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침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침체는 198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3차 7개년계획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⁵¹⁾ 북한은 경제침

51) 1990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64달러로 추산되며, 經濟成長率에 있어 1990년에는 휴전 이후 처음으로 -3.7%를 기록했고 1987년에서 1990년에 걸친 4년간의 평균성장률은 1.21%로 연평균 성장률 목표인 7.9%에 크게 밀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북한의 貿易赤字는 累增되고 있으며, 이 결과 1990년 말 현재 북한의 외채총액은 78억 6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부족으로 산업시설의 가동률이 45%에 지나지 않으며, 주민생활 수준

체가 지속되면서 政權維持와 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민생문제의 해결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改革과 開放 추진이 경제의 시장화 뿐만 아니라 民主化의 요구를 초래하여 체제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⁵²⁾ 따라서 북한은 대외개방 정책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된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본과 기술확보를 위해 미·일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고, 대남관계를 재조정하여 남한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된다.

또한 북한의 정치체제는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침체 등의 요인으로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특히 김정일 後繼體制의 鞏固化 정도는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 확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나, 사회주의권의 와해와 경제난의 심화 등에 따른 당 및 군부, 국민의 반발 가능성 등은 상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외교정책의 전환은 국내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의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世界秩序 재편과정에서 이루어진 한·소, 한·중 수교,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食糧事情도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있었다.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서울: 統一院, 1991.8) 참조.

52) 사회주의권 와해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처논리는 김정일이 1992년 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소연방 해체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여 북한은 1992년 3월 독립국가연합 구성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중국과의 기존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을 천명한 이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이 세계질서 변화에 부응하려는 북한의 대외정책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 現況

북한은 1995년 10월 현재 132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14개의 유엔기구와 11개의 정부간 국제기구 등 모두 25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외교관계 현황의 근거에 있는 대외정책 이념 및 노선과 정책추진의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對外政策 理念 및 路線

북한은 김일성 사후 1994년 7월 20일 김일성 추도대회시 김영남의 추도사, 9월 9일 국가수립 46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홍성남의 보고, 10월 16일 김일성 사망 1백일 추모회에서의 김기남의 추모사 등을 통하여 기존의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대외정책 이념하에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1994년 1월 1일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을 통해 보다 자세히 표명되었다. 이 사설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밝히신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대외정책적 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라고 천명하고, 세계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며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공동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 할 것”을 외교활동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 사설에서는 북한의 對外政策 路線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새해에도 자주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평등과 정의,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세계 모든 평화에

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교란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군축 특히 핵군축을 실현하여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을 실현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⁵³⁾

이와 같은 북한 대외정책의 이념은 1995년 7월 7일 김일성 사망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행한 양형섭의 추모사, 9월 8일 국가수립 4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행한 박성철의 경축 보고 등을 통해 동일하게 표명되고 있다.⁵⁴⁾ 북한이 기존의 대외정책 이념을 견지하는 것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새로운 정책을 표방하기 보다는 사망한 김일성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遺訓統治」의 일환인 것이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설정된 대외정책 이념 및 노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창출되기 시작한 이래 북한이 世界秩序 再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는 여전히 긴장과 대립상태에 있다고 인식하는 한편, 帝國主義 세력은 존속하고 있고,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 우위를 통해 世界制覇

53) 「로동신문」, 1995년 1월 1일.

54) 「로동신문」, 1995년 7월 8일; 1995년 9월 8일.

의 야망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⁵⁵⁾

새로운 世界秩序 창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김일성이 1992년 9월 1일 「메디아 인도네시아」 신문사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 초대국들사이의 대결로 인한 랭전구조가 허물어졌지만 제국주의의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변함없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하여 현대제국주의는 계속 힘의 정책에 매달려 세계를 저들이 좌지우지하는 1극화의 세계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1극화의 세계는 오히려 2극화의 세계보다 인민들의 자주화위업에 더 큰 장애와 위협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지배주의를 추구하는 또다른 새로운 빨력들이 나올 수 있는 위협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⁵⁶⁾

55)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랭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또한 김일성은 1991년 9월 26일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초대국사이의 대결로 인한 지난날의 랭전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제국주의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우위에 의거하여 지배와 예측의 낡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1991년 11월 11일.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로 인한 資本主義의 世界化에 대한 우려, 현대 제국주의는 여전히 「힘의 정책」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를 지배하려 한다는 점에 대한 불안, 새로운 支配主義 勢力圈의 등장에 대한 위기의식 등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인식하는 1극화 세계란 “현대제국주의가 주인 노릇을 하며 판을 치는 <서방화>된 세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1극화의 세계에서 “미국은 다름 아닌 <군주>의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세계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대 제국주의는 힘의 정책과 평화적 이행전략의 양면전술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제3세계 국가들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지배·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美·日 안보체제를 근간으로 지배주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력권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⁵⁷⁾

56) 「로동신문」, 1992년 9월 4일.

57) 리석윤, “1극화의 세계는 자주위업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세계,” 「로동신문」, 1992년 9월 19일. 특히 북한은 美·日 安保條約을 “일본령토를 군사기지화하고 일본군국주의를 재생, 재무장시켜 아세아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과 하루빨리 군사대국으로 되어 해외침략에 나서려는 일본의 군사적 결탁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條約이 극동과 아·태 지역에서 戰爭危險을 조성하고 있는 주요 요

냉전 종식 이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김일성이 1993년 6월 15일 제4차 비동맹국가 공보상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재차 표명되었다. 김일성은 “냉전시기에 초대국들사이의 대결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가리워지고 있던 제국주의적 모순들이 냉전의 종식과 함께 표면에 드러나 여러가지 문제들을 산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구체적인 問題點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서방세계에서는 리해관계에 따라 서로 배척하고 결탁하는 복잡한 관계속에서 새로운 뿔력들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군사적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한 책동이 로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빈부의 격차는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⁵⁸⁾

북한은 냉전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기구 형성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機構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말살하고 이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것”⁵⁹⁾으로 규정하는 한편, 多者

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2년 9월 11일; 1995년 11월 11일; 1995년 5월 20일.

58) 김일성, “뿔력불가담공보는 인민들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93년 6월 16일.

59) 「로동신문」, 1993년 3월 13일; 1993년 5월 23일. 북한은 1991년 1월

間 經濟協力機構 창설 논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해 「경제적 지배」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⁶⁰⁾ 이와 함께 북한은 여전히 남북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냉전의 종식에 따라 對美 직접협상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⁶¹⁾ 또한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현상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⁶²⁾

13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미·소간 군축, 쌍무적 군사조약의 폐기, 외국군대와 군사기지의 철수, 주한미군 및 핵무기의 철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시아 안보협력기구 창설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統一院, 「北韓 및 共產圈 動向」, 第115號 (1991.2), pp. 40~41.

60) 「로동신문」, 1993년 4월 27일.

61) 김일성은 1992년 4월 12일 *Washington Times*紙 기자와의 담화에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조미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 담화에서 김일성은 “냉전의 종식은 곧 힘의 정책의 파산이며 이것은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냉전이 종식된 조건에서 국제사회의 민주화, 자주화 과정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다같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에서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역사적인 세기로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4월 18일.

62) 김일성은 1992년 4월 15일 80회 생일 경축연회에서 행한 연설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를 통해 “오늘 세계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방

북한은 이러한 인식에 따라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의 기본 목적은 “국제사회를 민주화, 자주화”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국제정치, 군사안보, 국제경제분야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⁶³⁾

첫째, 國際政治分野에서는 자주적·민주적인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들의 대소, 강약, 빈부의 차이에 관계 없이 자주권과 영토완정,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軍事安保分野에서는 민족·국가·지역간 분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간섭 중지, 외국군대의 주둔과 기지설치 불허용, 지역적 군사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國際經濟分野에서는 평등·호혜적인 질서 수립을 위하여 불합리한 국제금융 및 통화체계, 불평등한 무역관계, 편파적인 국제분업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며, 발전도상국가들의 대외채무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⁴⁾ 북한은

대한 물질적 재부가 생산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국제적 련계가 밀접하게 되어 지구가 인류공동의 생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주관적 의사와는 달리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더욱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4월 16일.

63) 「로동신문」, 1992년 4월 8일; 1992년 6월 26일; 1993년 10월 15일; 1995년 5월 4일; 1995년 6월 18일; 1995년 11월 2일.

64) 「로동신문」, 1995년 10월 12일; 1995년 10월 15일.

이를 위해서 선진국들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남
남협조가 확대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⁶⁵⁾

이와 함께 북한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개념과 원칙을
설정하기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⁶⁶⁾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철폐”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⁷⁾ 또한 북한은 아시아의 정치·안보·
경제상황에 적합한 地域秩序의 수립을 제기하면서 자주·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발전을 제기하고
있다.⁶⁸⁾

나. 政策推進 現況

1) 대미 핵협상 타결 및 관계정상화 모색

김일성 사후 1994년 10월 21일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결과 「미·북한 기본합의문」이 채택됨으로써 김정일 체제의 대
외정책은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⁶⁹⁾ 미·북한의 합의결과

65) 「로동신문」, 1995년 5월 23일.

66) 「로동신문」, 1995년 10월 14일; 1995년 11월 5일.

67) 「로동신문」, 1995년 6월 7일; 1995년 8월 6일.

68) 「로동신문」, 1995년 1월 27일.

69) 미·북한 기본합의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Samuel S. Kim, “North
Korea in 1994: Brinkmanship, Breakdown, and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XXXV, no. 1 (January 1995), pp. 19~21 참조.

는 對北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과 미·북한 관계개선을 대가로 북한의 핵동결 및 궁극적인 핵주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⁷⁰⁾ 이에 따라 북한은 핵개발 동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對美 관계개선을 가시화하는 한편, 폐연료봉 건식보관 기간 및 과거 핵규명 시한의 연장을 통해 향후 협상 카드를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미·북한 기본합의문」 채택에 대해 1995년 1월 1일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자주적 립장과 일관한 평화적 핵활동, 평화통일정책의 빛나는 결실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

또한 미국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Warren Christopher, “America’s Leadership, America’s Opportunity,” *Foreign Policy*, no. 98 (Spring 1995) p. 24 참조.

70) 北韓側 이행사항은 ①과거 핵의혹 해소: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특별사찰 포함) 이행, ②핵시설 해체: 5MW 원자로 연료봉 재장전 포기 및 추후 해체, 50MW 및 200MW 원자로 건설 중단 및 추후 해체, 방사화확실험실 즉시 폐쇄 및 추후 해체, ③연료봉 처리: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보관후 제3국으로 이전, ④NPT복귀: NPT완전 복귀 및 임시·일 반사찰 이행, ⑤남북대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등이다. 한편 美國側 이행사항은 ①경수로 지원: 북한에 대해 2,000MW의 경수로 제공, 국제콘소시움 구성 및 공급계약 체결, ② 대체에너지 지원: 5MW 원자로 가동과 흑연원자로(50MW 및 200MW) 건설 중단에 따른 대체에너지로 중유 제공, ③북한과의 관계개선: 대북 무역 및 투자제한 일부 해제, 전문가회의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시 연락사무소 교환 등이다. 미·북한 기본합의문 전문은 「로동신문」, 1994년 10월 23일 참조.

을 촉진하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 사변으로 된다”고 평가하고, 미국의 성실한 이행은 양국관계의 신뢰조성,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북한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미·북한은 對北韓 경수로 지원문제로 4차례의 전문가회담과 1995년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준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그 결과 6월 13일 합의된 사항을 공동언론발표문으로 공표하였다.⁷¹⁾ 이후 KEDO-북한간 경수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공급협정 협상이 진행되어 12월 15일 타결되었다.

이와 함께 「미·북한 기본합의문」 이행의 일환인 미·북한간 連絡事務所 개설문제는 3차례의 전문가회담(워싱턴 1994.12, 평양 1995.1, 1995.9)에서 영사업무, 부지위치 등 관련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연락사무소 직원의 활동범위 문제 등 몇 가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미국은 1995년 1월 20일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무역,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등 4개항의 對北韓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한 이래 2월 14일 해외자산규

71) 미·북한 준고위급회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봉의 처리 등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합의되었으며, 간접적이지만 한국형 경수로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합의되었다. 「로동신문」, 1995년 6월 14일; 1995년 6월 15일.

제령을 개정하여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인적 교류, 북한상품의 반입, 경수로 건설 및 에너지 제공에서의 미국기업의 참여, 북한 언론기관의 활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美재무부는 4월 17일 미국 광물거래사인 코메탈사에게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사업허가서를 발부하였고,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3월 29일 미·북한간 직통전화 개설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 사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수로 공급협상의 타결,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의 진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미·북한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協定으로 대체하고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추진하는 한편,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미·북한 쿠알라룸푸르 準高位級會談의 북한측 대표단 단장 김계관은 6월 14일 공동보도문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과 함께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자면 조미 적대관계의 근저에 놓여있는 교전

관계를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⁷²⁾ 또한 북한은 1995년 6월 29일 “조선반도에서 평화 보장체계가 지체없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외교부 비망록을 발표하였으며,⁷³⁾ 1995년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승리 42돐」 기념 행사에서 행한 김광진의 보고, 9월 8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 10월 11일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⁷⁴⁾

2) 대일 수교협상 재개

1992년 8월 제8차 일·북한 수교협상 이후 북한은 핵문제 해결 및 일·북한 관계개선 속도문제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판단에서 대미 협상에 주력하면서 일본의 핵무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종군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對日 非難의 강도를 높이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4년 8월 북경에서 일본과 수교교섭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재개하였으며, 1995년 들어 막후접촉⁷⁵⁾ 결과 3월 30일 일본 연립3당의 訪北 대표단과 북

72) 「로동신문」, 1995년 6월 15일.

73) 「로동신문」, 1995년 6월 30일.

74) 「로동신문」, 1995년 7월 27일; 1995년 9월 8일; 1995년 10월 17일.

75) 1995년 2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호리 고스케 자민당 정조회장 대리가 김용순의 측근과 비밀리에 만나 여당의원단의 訪北을 논의하였고, 2월 말에는 일본 집권여당의 하나인 사회당 일·조위원회 위원장 시

한 노동당간에 ①조기 국교 정상화 노력, ②조건없는 대화와 교섭, ③자주 독립적인 입장에서의 교섭, ④정부의 교섭 추진 노력 등 4개 원칙에 합의하였다.⁷⁶⁾ 김용순 당비서는 4월 5일 「조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개최될 제9차 일·북한 수교회담은 전후 45년간 보상을 명기한 「3당 공동선언」의 원칙에 따라 개최되고, 핵문제·이은혜 문제 등 일체의 前提條件이나 미국 등 외세의 영향을 배제한 채 오직 관계개선을 위한 것이며, 이 합의서가 각 정부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⁷⁷⁾ 또한 북한은 1995년 5월 26일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연립여당 방북단 대표들과의 회담을 통해 쌀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북한에게 모두 50만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1995년 11월에는 일본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경제·무역교류 확대문제를 논의하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쌍방 대표단의 교류 강화, 기존의 쌍방 상품거래 조건의 수정, 조속한 국교정상화 실현 희망 등을 밝혔다.⁷⁸⁾ 이와 같이 북한은 1995년에 들어

마사키 유즈루 중의원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76) 「로동신문」, 1995년 3월 31일.

77) 「로동신문」, 1995년 4월 6일;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제166호 (1995.4), pp. 87~88.

78) 1980년 설립된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1993년 일조무역회 (1956년 설립)와 통합한 이래 주로 일·북한간 경제교류 업무, 대북 무역 관련 민간협의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해 왔다. 「월간 북한동향」,

일본과 수교회담 재개를 합의하고, 일본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빈번한 접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수교회담과 관련하여 일·북한은 몇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일본의 보상문제 등에 대한 양국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인해 關係正常化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과거청산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의 핵무장화 및 군사력 증강,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종군위안부 문제, 남북한 관계개선과 일·북한 수교문제 연계 등에 대해 비난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⁷⁹⁾

3) 대중 동맹관계 유지

북한은 한·중 수교 및 중국지도자들의 訪韓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과 同盟關係를 유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자 노력해 왔다. 중국 역시 북한을 이념적 동조

제173호 (1995.11), pp. 60~63.

79) 過去清算에 대한 북한의 관점은 1995년 8월 13일 외교부 비망록으로 발표된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과 군사적 강점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로동신문」, 1995년 8월 14일 참조. 종군위안부, 일본의 군사력 증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문제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1995년 8월 12일; 1995년 9월 28일; 1995년 10월 29일 참조.

자, 안보를 위한 완충국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북한 공존관계의 유지 차원에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김일성 사망시 강택민 주석, 이붕 총리, 교석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연명으로 조전을 보냄으로써 김정일 체제를 즉각 지지하는 한편, 1994년 10월 조·중 외교관계 설정 45주년을 기념하여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강택민이 김정일에게 축전을 보냄으로써 김정일을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 예우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對中 訪問外交를 지속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유지하고자 하였다. 1994년 8월 말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이 방중하여 중국의 정전위 대표단 철수, 북한의 정치경제적 내부사정, 중국의 對北韓 물자지원 등을 협의하였으며, 1994년 10월에는 부주석 이종욱이 중국정부 창건 45주년(10월 1일)경축행사에 참석한데 이어 외교부 부부장 조규일이 방중하여 중국 외교부장 전기침 등과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 방문외교는 1995년에도 지속되었다. 1995년 1월 김병식 부주석, 김복신 부총리의 방중에 이어 2월에는 황장엽 당 비서 일행, 3월에는 이희규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당 대표단, 4월에는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10월에는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정각 상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방문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정치·군사·경제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당·정·군 인사들의 지속적인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기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쌀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 화학비료 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시에 중국 地方政府들과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5년 7월 11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34주년을 맞아 양국간 전통적인 친선·협력관계 증진을 역설하였으며,⁸⁰⁾ 10월 25일 중국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로동신문」에 “조중친선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여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며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⁸¹⁾

4) 대러 관계 재조정

북한은 러시아와 이념적 유대 및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탈피하여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재조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탈출 북한인 벌목공의 한국 인도, 6.25관련 문서 공개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러시아와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1993년 8월 김정우 대의

80) 「로동신문」, 1995년 7월 12일; 1995년 7월 13일.

81) 「로동신문」, 1995년 10월 25일.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대표단 및 1994년 5월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대러 관계 회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김일성 사망과 관련하여 7월 10일 옐친 대통령의 조의 표명 및 러시아 외무부의 양국간 선린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9월 옐친 대통령 특사 파노프 외무차관의 訪北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논의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10월 12일 대북한 수교 46주년에 즈음하여 외무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선린·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는 공인된 國際原則에 대한 상호존중 원칙, 주권·내정불간섭, 사회제도 선택의 자유권 등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향후 제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관계를 증진시킬 것임을 밝혔다.⁸²⁾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를 공표하면서 대러 經濟協力關係의 증진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1994년 10월 2일 지리노프스키를 단장으로 하는 자유민주당 대표단을 초청하여 비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10월 18일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대러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⁸³⁾ 또한 북한은 1994년 11월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한수길을 단장으로 한

82) 「內外通信」(綜合版 54), pp. 174~175.

83) 위의 책, pp. 175~176.

대의경제위원회 대표단을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하여 1995년 초 블라디보스톡에 「정무원대표부」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대러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84) 또한 북한은 1995년 1월 러시아연방 공산당 제3차 당대회와 관련하여 당부부장 박경선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축하사절로 파견하여 러시아내 공산세력과의 연대강화를 모색하였다. 85) 이와 함께 북한은 1995년 2월 24일 러시아와 원목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7천명의 북한 벌목공 파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林業協定을 조인하였다.

한편 1995년 9월 7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996년 9월 10일 효력이 만료되는 「러·북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음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북한은 과거의 軍事同盟 관계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보편적인 선린관계를 재정립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86)

84) 余仁坤,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p. 60~62 참조. 1995년 3월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하여 무역·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각서를 조인하고, 통상 및 교류 증진, 공동실무위원회 발족 등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1995년 10월 27일 러시아 연해주와 경제협력문제에 합의하고 「경제·무역 각서」를 교환하였다. 「월간 북한동향」, 제165호 (1995.3), pp. 94~97; 「월간 북한동향」, 제172호 (1995.10), pp. 88~90.

85) 「월간 북한동향」, 제163호 (1995.1), p. 114.

86) 「월간 북한동향」, 제171호 (1995.9), pp. 58~60.

이와 함께 북한은 과거 소련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루지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 외교관계 수립 및 무역, 경제협조 협정을 체결하여 관계증진을 도모하고 있다.⁸⁷⁾

5) 대유럽 및 제3세계 경제외교 추진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정 대표단을 서방국가들에 파견하여 친선유대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월과 11월 황장엽을 단장으로 한 당대표단을 프랑스·영국 등에 파견하였으며, 9월에는 대외경제위원회 대표단, 11월에는 김병식을 단장으로 한 사민당 대표단이 서유럽을 방문하였다. 한편 1995년 3월 노르웨이 외무부 대표단, 6월 프랑스 경제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다.⁸⁸⁾

이와 함께 북한은 1995년 1월 25일 국제금융기관으로는 첫 번째로 네델란드 ING은행과 북한내 합영은행 설립에 합의하였

87) 북한은 1994년 1월 5일 그루지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독립국가연합 12개 구성국들 모두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5개 구소련 공화국과는 에스토니아와의 외교관계 수립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월간 북한동향」, 제161호 (1994.11), pp. 78~79.

88) 「内外通信」, 第983號 (1995.12.14); 「월간 북한동향」, 제174호 (1995.12), pp. 59~60.

으며,⁸⁹⁾ 2월에는 영국의 페레그린 투자주식회사와 합작으로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설립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1995년 3월 서방선진국과는 최초로 독일의 청산 및 구상무역회사(DCCG)와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간에 향후 5년간 매년 1억 달러, 이후는 3억 달러 규모의 청산거래를 추진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서방선진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經濟外交에 주력하고 있다.⁹⁰⁾

한편 북한은 김일성 사후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초청·방문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이들과의 關係緊密化를 모색하였으며,⁹¹⁾ 1995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북한 대표단의 해외방문 및 해외단체·인사의 초청은 대부분 경제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에 편중되는 양태를 보였다.

1995년 1월 김병식 부주석이 태국과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89) 「월간 북한동향」, 제163호 (1995.1), pp. 109~111.

90) 「內外通信」, 第944號 (1995.3.16).

91) 1994년 9월 태국 외무부 동아시아국장의 방북이 있었으며, 10월에는 최현덕 사로칭 부위원장의 태국 방문 및 태국 외무부 보도총국장의 訪北이 있었다. 또한 10월 인도네시아 인민대표회의 의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경제협력을 논의하였으며, 2월에는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의 태국 및 방글라데시 방문시 북한은 태국과 30만톤의 쌀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문화대표단의 1월 중국·베트남, 2~3월 당대표단의 네팔·파키스탄 방문 등에 이어 6월 최용해 사로청 위원장의 네팔 방문, 당대표단의 네팔·인도 방문과 7월 외교부 대표단의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방문 및 9월 파키스탄·인도 방문 등이 있었다. 또한 11월에는 최광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기도 하였다.⁹²⁾ 이와 함께 북한은 1994년 10월 라오스 정부와 연광산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래 라오스에 주석광산 및 연광산 개발투자를 추진하는 등 동남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⁹³⁾

6) 남한배제전략 지속

북한은 1993년 3월 NPT탈퇴 이후 1994년 4월 28일 미국에 대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 제의에 이르기까지 南北對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안정·통일문제 전반에 관해 정치적 타결을 도출하려는 「主 대미회담, 從 남북대

92) 「월간 북한동향」, 제171호 (1995.9), p. 68; 「월간 북한동향」, 제173호 (1995.11), pp. 64~66.

93) 「월간 북한동향」, 제172호 (1995.10), pp. 100~101.

화」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망 직전인 1994년 6월 28일 南北頂上會談 개최에 호응함으로써 이같은 전술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는 입증되지 않았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일관되게 “「통일3원칙」 및 「10대강령」을 구현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 실현”을 천명함으로써 김일성 시대에 정립된 대남·통일정책을 계승·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5년 1월 1일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을 통해 “새해 1995년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현세기안으로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다”라고 밝히고,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은 일관하며 변함이 없다”⁹⁴⁾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통일3원칙」과 「10대강령」을 대남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계속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二重的 對南政策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김일성 사후 북한이 실제 추진한 대남정책은 남한을 배제한 채 대미 직접협상을 통한 체제유지 도모 및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공존 모색과 통일전선전술 강화라는 이중

94) 「로동신문」, 1995년 1월 1일.

전략 가운데 통일전선전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단 방북 환영 담화(1994.7.14),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1994.8.13~15), 단군릉 준공식에 대한 남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초청 서신 발송(1994.9.25) 등을 통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조문단 방북 불허, 범민족대회 불허, 「주사파」 척결 등의 조치에 대해 對南誹訪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1994년 2월 21일 「미·북한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는 반면, 남한당국에 대해서 김일성 조문 불허에 대한 사과 요구, 국가보안법 철폐 및 비전향장기수 석방, 안기부 해체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1995년 1월 24일 정당·단체연합회의를 통해 8월 15일 판문점에서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⁹⁵⁾ 이는 김일성 사후 최초의 對南提議였다. 이후 북한은 「통일대축전」 개최를 명분으로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하는 한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남한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비방의 강도를 높이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안기부 해체 투쟁 등에 더해 「김영삼 정권 타도」를 선동함으로써 남한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5년 5월 30일 북한 수역을 침범한 제86 우성호를 나포하고, 중국 연변에

95) 「로동신문」, 1995년 1월 25일.

서 안승운 목사를 납치하는 등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양태를 보였다.

한편 북한의 쌀지원 요청에 따라 1995년 6월 北京에서 남북 대화가 재개된 이후 9월까지 3차례에 걸친 쌀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은 15만톤의 쌀을 지원받았으나, 의제를 쌀문제로만 한정 시킴으로써 남북당국간 대화를 거부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5년 6월 15일 미·북한 경수로협상 타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 문제와 관련하여 KEDO를 대표하는 「미국만이 기본상대자」라고 천명⁹⁶⁾하는 동시에 對美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하는 등 남한 배제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96) 이에 덧붙여 “만일 케도에 속해있는 그 어떤 3자가 앉을자리 설자리도 모르고 중뿔나게 나서서 간참하려든다면 일은 복잡하게 번져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5년 6월 16일.

第三章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1. 政策推進 影響要因

가. 政治·이데올로기적 요인

金日成 사후 1년 이상이 경과한 1995년 12월 현재 북한의 「유일한 후계자」 金正日은 국가주석 및 당 총비서직에 공식 취임하지는 않고 있지만, 10차례의 각급 군부대 방문 및 군관련 행사 참여,⁹⁷⁾ 국가과학원 현지도 등 공식행사 참가,⁹⁸⁾ 최

97) 1995년 들어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및 군행사 참여 내용은 인민군 제214부대 시찰(1.1), 인민군 제9차 선동원대회 참가자 집견 및 군협주단 공연 관람(1.28), 인민군 제291부대 여성해안포병중대 시찰(2.5), 해군 제155부대 시찰(2.6), 오진우 빈소 문상(2.25), 오진우 장례식 참석(3.1), 집단체조 「영원히 모시리」 관람(3.5), 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석(3.15), 인민군 협주단 공연관람(3.17), 인민군 제1017부대 시찰(4.25), 인민군 제853해병부대 시찰(6.15), 「군훈련일군 회의」 참가자 면담(8.6), 「군여성해상훈련」 지도(8.28), 인민군 제893부대 시찰(9.13), 당창건기념 군열병식 참석(10.10) 등이었다.

98) 1995년에 김정일이 참석한 공식행사는 국가과학원 현지도(4.28), 금수산기념궁전 관람(6.23), 김일성 사망 1주 추모대회 참석(7.7),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 참석후 간부들과 기념촬영(7.8), 당창건기념탑 시찰(10.5),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 개통식 참석(10.9),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및 당창건 기념 청년학생들의 야회참석(10.10), 당창건50주 행사 참가대표와 기념촬영(10.11), 평양-향산간 고속도로 개통식 참석(10.12), 조총련 각대표단 집견(10.15), 「로동신문」사와 조선중앙방송 직원들과 기념촬영(11.18), 사회안전분야 및 사법검찰기관 관계자들과 회동(11.18) 등이었다.

고사령관으로서 명령 하달 및 군인사 단행,⁹⁹⁾ 4편의 논문 발표¹⁰⁰⁾ 등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하고,¹⁰¹⁾ 공식매체들을 통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일시하여 카리스마의 전이를 시도하는 한편, 김정일 偶像化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¹⁰²⁾ 이는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체제가 金正日 唯一體制로 공고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지위에 취임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권력승계에 이상이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김정일 유일체제는 공고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99) 김정일은 군인사와 관련하여 1995년 10월 8일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광과 이을설을 원수로, 조명록·이하일·김영춘을 차수로 승진시키는 한편, 국방위원장 명의로 오진우 사망으로 공석이 된 인민무력부장에 최광을 임명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같은 날 「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65호」를 통해 김하규·현철해·김병률 등 3명을 대장으로, 전기련·리명수·오금철·윤종린·김치관 등 5명을 상장으로, 김형룡·신동균·최부일·이주을 등 4명을 중장으로, 강표영·이경환 등 2명을 소장으로 승진시켰다.

100) 김정일은 1995년 한 해 동안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5.25),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0.2),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12.15) 등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01) 「로동신문」, 1995년 2월 7일.

102) 북한은 김정일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김정일 53회 생일(2.16), 국방위원장 추대2주년(4.9), 원수칭호 3주년(4.20), 당사업시작 31주년(6.19) 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김일성에 의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2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¹⁰³⁾ 이 과정을 통해 김정일은 이념적·제도적·인적 차원의 權力基盤을 공고히 하였다.

둘째, 김정일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軍部를 단계적으로 장악하여 김일성 사망 이전에 이미 권력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집중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의 지지를 도출·확산함으로써 軍部 장악을 공고히 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래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을 관장해 왔으며,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정의하고, 북한이 취해야 할 총체적인 政策方向을 제시한 인물은 김정일이었다.¹⁰⁴⁾

103) 북한은 김정일이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된데 이어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김일성의 唯一한 後繼者로 추대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73.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이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김정일이 1964년 6월 19일부터 黨事業을 시작하였다고 공개하고, 1994년 6월 김정일의 당사업 30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104) 사회주의권 붕괴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 1992년 1월 3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넷째, 북한체제는 「수령론」에 입각한 김일성 유일체제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인 김정일에 의해 운용되는 체제 역시 체제관성상 유일체제를 표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일 유일체제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김정일의 카리스마 및 업적 부족, 폐쇄체제 유지에 따른 경제난 해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김정일의 正統性 및 體制 安定性은 취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¹⁰⁵⁾ 또한 김일성 사후 외형적으로는 김정일 유일체제가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軍部の 영향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黨 중심의 集團指導體制 성격을 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⁰⁶⁾ 이 경우 김일성 유일체제와는 달리 권력장악, 정책노선 등을 둘러싸고 권력 상충부내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당의 총로선,” 1992년 10월 10일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1993년 3월 1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 수 없다”와 같은 일련의 談話論文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의 概念 規定 및 總體的인 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 105)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Rinn S. Shin and Robert G. Sutter,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20, 1994);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XXXV, no. 6 (June 1995), pp. 530~532 참조.
- 106) 軍部の 영향력 증대의 한 예로 김일성 사후 북한의 권력서열에서 백학림, 김광진, 김익현 등 군부원로인 차수들이 김기남 당비서에 앞서 18~21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각종 조직 및 사상교양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심화 및 외부정보 유입에 따라 주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住民意識變化의 핵심 내용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개인주의적 경제행위, 일탈행위 등의 증대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암시장 및 지하경제의 등장, 화폐에 대한 가치변화, 뇌물의 성행 등 物質主義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학습 및 조직생활 기피, 노동규율 위반,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이 만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식량 폭동 등 비조직적인 저항도 발생하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점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社會統制의 效率性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은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정세는 현재 인민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정도의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소멸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일 유일체제가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된 일종의 非常體制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한 조직화된 반체제세력의 등장 및 김정일 체제의 전복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김정일 체제는 脆弱性을 노정하면서도 상당 기간 존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는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정일 유일체제로 공고화된다는 것은 폐쇄사회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社會開放이 가속화될 수 있는 대외정책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성격과 함께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 역시 대외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김정일은 1994년 11월 1일 김일성 사후 최초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라고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사후에도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였다.¹⁰⁷⁾

따라서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며 이는 북한의 모든 분야,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보편사상임과 동시에 유일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3가지 構成要素를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사회역사원리, 그리고 자주적 입장의 견지, 창조적 방법의 구현,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등으로 정형화하였다.¹⁰⁸⁾ 주체사상의 내용 가운데 북한의 政策推進에

107) 「로동신문」, 1994년 11월 5일.

108)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 107~117; 김정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주적 입장의 견지라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이다.

북한은 자주적 입장의 견지라는 지도원칙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구현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 다시말하여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에게 복무하고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며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⁹⁾

이러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극단적인 反外勢的 論理이다. 이는 북한의 효율적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pp. 125~159.

109) 『철학사전』, p. 110.

대외정책의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逆機能的 側面은 주체사상의 또 하나의 지도적 원칙인 창조적 방법의 구현으로 보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인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중 후자는 북한의 정책추진에 신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이다. 북한은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혁명과 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끊임 없이 변화하는 력사적 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¹¹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은 狀況變化에 따른 政策轉換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언제든지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정책지침의 우선순위는 명백히 자주적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파생한 慣性으로 인해 북한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저해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10) 위의 책, p. 110. 김정일은 「실정에 맞게하는 방법」에 대해 “언제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 148.

나. 經濟的 要因

북한 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 계속적으로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¹¹¹⁾ 북한은 식량 및 소비재, 생산원자재, 투자재원, 기술력과 인적 자원 등 경제전반의 부족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경제 현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994년 현재 북한의 GNP는 남한의 1/18인 212억 달러, 1인당 GNP는 1/9인 923달러로 추산되며, 1990년 -3.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이래 연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¹¹²⁾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모순에 기인하는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상실 및 노동생산성 정체, 자본·기술 그리고 경영 관리능력의 부족,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과다한 軍事費 및 체제강화와 대외홍보를 위한 비경제적인 분야에 과다한 투자재원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¹³⁾

111) 북한은 1993년 12월 9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회의에서 1987~1993년의 제3차 7개년계획이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방위력 강화”로 인해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하였다.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 수행정형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로동신문」, 1993년 12월 9일.

112) 韓國銀行, 「1994年 北韓 GNP 推定結果」(1995).

113) 북한의 경제난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吳承烈, “북한의 경제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食糧 및 生必品 부족현상의 심화이다. 북한은 곡물생산에 부적합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식량의 자급자족이 어려웠으며, 최근에는 이상저온현상, 병충해 확산 및 농약 부족, 경작방식 실패 등으로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食糧需要는 연 640~660만톤 정도로 추정되나 실질생산량은 1991년 443만톤, 1992년 427만톤, 1993년 388만톤, 1994년 412.5만톤으로 매년 약 200만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 여름의 水災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고 있다.¹¹⁴⁾ 이와 같이 북한의 구조적 식량부족량은 연간 200만톤으로 추정되고, 수재로 인해 1995년도 부족량은 전체수요의 약 절반인 350만톤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계상황에 달한 식량난에 따라 북한은 1995년 6월 남한으로부터 15만톤의 쌀을 무상지원 받는데 동의했으며, 다시 7월과 9월에는 일본으로부터 각각 30만톤과 20만톤의 쌀을 지원받았다.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값이 싸고 양이 많은 옥수수

정책 전망,” 民族統一研究院, 「金正日 政權의 向方」(제18회 국내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11.8), pp. 48~62 참조.

- 114) 유엔평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수해 피해정도를 약 10만 가구의 이재민 발생, 약 190만톤의 곡물유실, 상당수의 생산시설 및 산업기반 시설의 파괴로 추계하고 수해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DPRK: Assessment of Damage and Immediate Relief Requirements following Floods* (September 12, 1995).

밀가루 등을 수입하고, 「하루두끼 먹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량이 부족하여 식량기근이 만성화되고 있다. 또한 일반 주민에 대한 의류 공급량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 역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식량·소비재 부족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생산원자재의 공급 역시 심각한 부족현상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석탄생산 및 원유도입량의 대폭 감소 등으로 에너지 공급난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부문의 생산위축 및 수송부문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994년 현재 북한의 外債總額은 약 106.6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총외채 대 GNP 비율은 50%가 넘고 있으며,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외채 대 수출비용은 1,000%를 초과하여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대외신용도는 세계 119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북한 경제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선진외국의 자본 기술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도 1990년대에 들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1.1억 달러로 1993년도의 26.4억 달러에 비해 20% 감소하였다.¹¹⁵⁾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

115) 韓國銀行, 「1994年 北韓 GNP 推定結果」(1995).

기 보다는 김일성 생존시인 1993년 12월 9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회의에서 제시되고, 19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 채택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관철 및 석탄·전력·철도운수 금속공업 발전을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특히 대외경제개방과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령들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 1995년에 들어 북한은 「대외경제계약법」(2.22), 「보험법」(4.6),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6.28), 「합영법시행규정」(7.13),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 및 임차 대리업 무규정」(7.13) 등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한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¹¹⁶⁾ 따라서 북한은 향후에도 무역제일주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확대 지정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체의 投資誘致에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라, 대외개방의 파급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하고, 외국기업체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이

116) 1995년 상반기 중 철조망 설치(40km)와 나진호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진-훈춘간 광케이블 부설공사와 나진 국제통신센터의 기초공사, 공업용수 공급용 후창저수지 저수능력 확장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다.¹¹⁷⁾ 또한 북한은 과거 重工業 優先主義에서 전환하여 농업 및 경공업발전을 통한 주민불만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에서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제지원을 최대한 도출하려 할 것이며, 南韓企業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성적인 물자부족 및 병목현상, 기술 및 설비의 낙후, 투자재원 조달능력 결여 등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체제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경제정책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내에 북한 자력에 의한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 國際環境要因

탈냉전 이후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동북아정세, 그리고 미·일·중·러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대외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는 국제환경적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117)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外國人 單獨企業은 자유경제 무역지대 내에만 창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제3조), 종업원 채용을 북한의 勞動機關과의 契約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점(제16조), 「외국인기업법」 제21조에는 직업동맹이 從業員 活動을 감독하도록 규정한 점 등은 북한이 제한된 地域만을 開放하고, 북한근로자를 철저히 감독하여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동서대립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¹⁸⁾

첫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대결구도가 종식되고, 향후 세계정세는 인류복지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모색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전세계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유일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화 현상이 촉진될 것이나, 미국은 국제문제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자가 아니라 調停者 役割을 수행할 것이다.¹¹⁹⁾

셋째, 환경문제 등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사안이 중요시 되고 유엔 등 國際機構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軍縮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긴장완화는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경제 및 환경 등의 영역에서의 국제갈등은 증대될 것이다.

넷째, 지역분쟁의 局地化가 진전되며, 분쟁 해결을 위한 국

118) 새로운 國際秩序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는 Zbigniew Brzezinski,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256 (Winter 1991/92), pp. 3~17; Joseph S. Nye,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pp. 83~96 참조.

119)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Christopher, "America's Leadership, America's Opportunity," pp. 8~10 참조.

제적 노력이 강화될 것이지만 민족갈등 등을 둘러싸고 지역분쟁 자체의 발발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등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도, 지역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선후진국간·블록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 전세계적인 차원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추세와 같은 맥락에서 탈냉전적 兩者關係의 재조정, 다자간 경제·안보협력 논의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기와 갈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이는 역내 강대국간의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의 특징적인 측면은 미·러의 독점적 영향력 감소와 日·中의 영향력 확대 현상이다. 美國은 아태 지역에서의 기득권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긴장완화, 국내경제력의 약화 등으로 아태 지역 駐屯軍 축소 등 전략적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일과의 기존 동맹체제 유지, 중·러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 발전, 북한과의 관계발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均衡的 役割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¹²⁰⁾

120)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影響力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는 견해는

냉전 종식후 日本은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自衛隊의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는 한편,¹²¹⁾ 미국과의 기존 정치·군사·경제관계 조정, 地域列強으로서 중국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中國은 동북아에서 군사·외교·경제분야에서 최대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¹²²⁾ 全方位外交를 통해 미·러의 영향력 감소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하고, 일본과 경제적 협조를 유지하되 정치·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하고자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pp. 90~102 참조.

- 121)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Thomas L. Wilborn, *Japan's Self-Defense Forces: What Dangers to Northeast Asia?*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1994), pp. 1~39 참조.
- 122)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995년도 국방예산이 75억 달러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4배에 달하는 GDP의 5.4%(284억 달러)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5, 1995.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 지수를 사용한 경제력 평가에 따르면 1992년 중국의 GNP는 1.7조 달러이며, 이는 미국의 총GNP 5.61조 달러와 일본의 2.37조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이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93); Xin Dun, "China's Economic Strength Is Overestimated," *Beijing Review* (June 14~20, 1993), pp. 9~10.

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國內問題로 인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대외영향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¹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북한과의 기존관계 유지, 한국·미국·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極東地域의 군사력을 상당기간 유지·강화하면서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모색하는 미국과의 협조하에 일본·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強大國間 勢力關係는 이와 같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있으며, 이는 域内の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에 상존하는 분단국문제, 중국·북한의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 영토분쟁 발발 및 군비경쟁의 가속화 가능성 등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성은 저해받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美國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고,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123) Curt Tarnoff, *Conditions on U.S. Foreign Assistance to Russia*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6, 1995) 참조.

있는 일본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와 함께 역내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향, 즉 미국이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日·中·러가 勢力均衡을 이루는 「1+3」 體制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¹²⁴⁾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는 사실상 역내 국가들을 포괄하는 國際機構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보와 경제의 두 측면에서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1+3」 체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영토·국경분쟁 및 군비경쟁 등 안보위협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지역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CSCE)와 같은 역내 多者間 安保協議機構와 함께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와 같은 역내 경제협력기구가 보다 확대 발전되는 형태로 域內 多者間 經濟協力이 제도화되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변 4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냉전종식 및 소연방 해체 이후 마련된 유일 초강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미국은 地域均衡者의 입장

124) 鄭圭燮·姜元植·文興鎬,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108.

에서 한반도에서 상존하고 있는 北韓의 위협을 통제함으로써 한반도의 平和를 확보하는 것이 동북아의 안정과 나아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내 政治·軍事的 役割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에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행사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융통성있는 全方位外交를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에서 地域強國으로서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中國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한·중 수교로 조성된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과 미·북한, 일·북한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국제적 지위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간의 勢力均衡 및 한반도 현상유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넷째, 소연방 해체 이후 세계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러시아는 국내정치·경제적 불안정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소비용으로 기존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을 도모하는 등 韓半島 均衡政策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체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發言權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변4국과 북한은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 평화공존 및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주변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을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변4국은 한반도가 다른 세력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긴장완화는 4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¹²⁵⁾ 따라서 주변4국은 韓半島 現狀維持 次元에서 남북한간의 긴장

125) Donald S. Macdonald,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p. 140.

완화와 평화공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4국은 통일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여 각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한반도의 궁극적인 統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政策變化 展望

가. 政策目標 및 路線

김일성 사후 북한은 지속된 경제침체와 카리스마의 소멸에 따라 체제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김정일 정권이 당면한 핵심 國家目標은 체제의 안정성 확보이다. 북한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 정권의 對外政策 目標은 체제 안정성 확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두어질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 안정성 확보 및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의 획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는 정권수립 이후 북한이 지향해 온 정통성·안보·경제발전 추구 및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

한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 강화”라는 기존 목표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體制維持에 주안점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향후 김정일 정권은 일차적으로 국가생존에 초점을 둔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일성 사후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통치에 따라 기존 정책의 답습에 주력하고 있지만, 향후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공식 취임한 이후 어떠한 대외정책 노선을 추구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향후 상당 기간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유일·폐쇄체제를 고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자주·평화·친선」이라는 대외정책 이념 및 기존의 대외정책 노선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실용주의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자주」에 대한 강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부터 냉전 종식 이후 세계질서 재편의 기본 추세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정치·이데올로기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국제환경요인 등과 같은 정책추진 영향요인에 따라 政策推進의 실질적인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대외정책 목표에 부응하여 상당한 변화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의 基本 方向은 주변4국과의 관계강화, 경제외교의 활성화, 이중적 대남정책의

지속 등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 세계적 차원의 시장경제화 현상의 심화에 대응하여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군사적 유일 초강대국이며 전세계적 차원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世界秩序 변화에 부응하면서 체제안정성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안보·경제협력기구의 형성이 가시화된다면 국제적 고립 탈피 및 대외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이 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정일 유일체제 및 폐쇄체제로 유지되는 한 북한 대외정책의 效率性은 저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미관계 중시 외교 및 경제외교의 활성화 과정에서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른 정치·경제적 다원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으로써 북한체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나. 政策推進 方向

1) 주변4국과의 관계긴밀화

주변4국에 대한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은 대미·일관계 진전 및 중·러 우호관계 증진에 의한 국제적 고립 탈피, 對南劣勢

회복 및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두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미·북한 기본합의문」을 이행해 나가면서 對美 關係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난 타개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안보위협 완화 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면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이행하면서 KEDO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 부대시설 제공 및 상환 조건에 대한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미국에 대해 쌀지원 및 대북 경제제재 추가 해제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위한 중간조치로서 미·북한 상호안보협의회 구성 등 정치·군사 협상통로 개설을 제안함으로써 韓·美 공조체제 이완 및 남한 배제 효과를 거두려할 것이다. 북한은 특히 1996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감안하여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내 미·북간 군사채널 확보, 유엔사 해체,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의 一括妥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에 편승하여 미국내 親北韓團體를 적극 조직하는 동시에 저명인사에 대한 초청외교를 강화하여 대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화학무기·미사일

수출문제 등으로 대미 수교의 조기 달성이 어려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미 수교에 따른 북한의 사회개방 파급효과와 내부결속 이완을 우려하여 대미 수교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은 對日 수교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일본의 보상금을 확보하고, 일본기업의 대북투자 유도 및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대일 수교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은 이은혜 문제의 의제 채택을 거부하는 한편, 일본인妻 고향방문에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협상진전을 계기로 朝總聯의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총련자산의 동결해제 및 조총련 송금에 대한 규제 해제 등을 요구하고,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증대를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對中政策에 있어서는 경제지원 획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鄧小平 사후 중국의 정세변화에 대비하여 혁명이후세대 간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지원 획득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조·소동맹조약」 폐기로 북한은 군인사의 상호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對中 軍事協力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정일은 권력승계 이후 頂上外交를 통해 권력기반 및 대외적 위상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중국 방문 및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對러政策에 있어서는 새로운 「조·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1996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시 보수세력의 집권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들과의 교류 확대 노력을 통해 러시아정부의 親남한정책을 견제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변4국 모두는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 평화공존을 원하고 있으므로 주변4국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외교의 활성화

북한이 처한 經濟難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김정일 정권은 경제외교를 보다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추진할 경제외교의 주된 방향은 인접국가로부터의 경제원조 확보, 유럽국가들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첫째, 북한은 1995년 여름 수재를 겪은 이후 내부사정의 노출이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식량난 해결과 수재 복구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단시일내에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은 당면하여 외부로부터의 經濟支援을 최대한 도출하여 경제위기를 모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수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한 지원은 주로 한국·중국·일본 등 인접국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기타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인접국가로부터의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회주의경제권의 와해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자본주의경제권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영국·독일 등 유럽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향후 이러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선진국가들에 대하여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 투자 유치 및 교역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지원 확대 및 자원공동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출 등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중적 대남정책 지속

북한이 기존 대남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 핵심이유는 체제의 성격 및 체제유지의 필요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첫째, 정치·사회체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북한은 「수령론」에 입각한 김정일 유일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김정일 이상화작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일체제 구축 및 개인의 이상화는 폐쇄사회에서만 가능하며, 김정일이 1995년 6월 19일 발표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의 필수적 요구”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閉鎖社會를 유지하여야 한다.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일이 통일의 상대방인 남한과 사회개방을 초래할 전면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 폐쇄사회로 유지되는 한 어떠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체제의 성격상 김정일 정권은 기존 대남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진정한 남북화해·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는 없다.

둘째, 통일이라는 命題는 북한체제의 결속 및 존립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대남비방을 강화하는 것도 內部結束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유지와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남한을 배제하고 대미 직접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왔는 바, 남한의 대북 쌀지원, 미·북한 경수로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南韓 排除戰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대화분

위기」 조성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최대한 지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남한당국을 배제하지만, 경제적 이익은 최대한 도출하는 政經分離의 정책기조하에 민간차원의 南北經協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外資誘致가 수반되어야 하나 미·일과의 관계정상화 논의과정에서 단기일내에 북한의 경제회생에 충분히 필요한 경제지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미·일은 자국의 경제사정 및 남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대북한 경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南北經協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셋째, 북한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북한의 投資環境이 개선되고 있음을 표방함으로써 외국자본가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군사문제에 있어서는 남한을 배제하면서도 제한된 개방지역에 남한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도모하는 등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함으로써 ①경제적 실익 획득, ②대미·일 관계개선의 조건 충족, ③남한 배제전략 지속 등을 거양하려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김정일의 공식지위 취임시 한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당·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

한은 실현불가능한 제의를 통해 실질적인 南北頂上會談을 회피하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선전효과를 최대한화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기일내에 북한이 기존의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체제의 본질적 개혁 및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반대급부로 기존의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남북공존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¹²⁶⁾

126) 南北共存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①남북평화협정 체결 의사 표명, ②남북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 방안 제의, ③상호 체제인정 및 남북공존 천명 등으로 예상된다.

第IV章 結 論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대미·일 관계개선의 가속화 및 경제외교의 활성화라는 특징을 보이는 한편 남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하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에 따라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經濟發展과 統一實現을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되, 동북아정세의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이 기존 대남전략을 견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른 외교·안보정책 추진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성급한 統一至上主義는 대내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정세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주변국가의 반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통한 早期統一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기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국내적 역량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독의 흡수 통일 경우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안보태세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統一基盤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내적으로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지속하면서 안보태세를 재정비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안보외교,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北韓의 점진적인 개방·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외교·안보정책이 지속적으로 모색·추구되어야 한다.

첫째, 外交面에서는 한국의 국내외적 역량 및 위상 강화라는 핵심적 국가이익 확보에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경제마찰을 해소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미·일 등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대미관계의 기본틀을 견지하면서 대일·중·러 관계발전을 모색함으로써 「1+3 체제」에 상응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安保面에서는 신국제질서에 부응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안보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反共理念 퇴색에 따른 가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한다. 한·미 안보유대의 기본틀을 견지하면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탈냉전적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통일·외교·대북정책 입안·추진에 있

어서 전반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변4국은 이미 탈냉전적 차원에서 남북한에 대한 均衡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국제정치적 역할을 인정하고 대미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관계의 기준을 북한에 두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북한이 매개된 3각구도가 아니라 쌍무관계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일의 대북한 관계진전을 활용하여 북한체제 변화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미·일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변국도 한국에 대해 이른바 北韓카드를 이용하는 정책을 더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것이며, 현상유지 차원의 분단유지·관리정책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 현상변경 차원의 통일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1. 單行本

-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第I~IV輯」. 서울: 國土統一院, 1988.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리순덕.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주체의 민족관을 구현한 조국통일위업의 대강」.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0」.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 余仁坤.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 鄭圭燮 외.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鄭圭燮.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 鄭鎮涓. 「北方三角關係: 北韓의 對中-蘇關係를 中心으로」. 서울: 法文社, 1985.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199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1994.
-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서울: 統一院, 1991.8.
- _____. 「北韓概要 '91」. 서울: 統一院, 1990.
- _____. 「北韓 및 共産圈 動向」, 第115號 (1991년 2월).
- 韓國銀行. 「1994年 北韓 GNP 推定結果」 (1995).
-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Gelman, Harry. and Norman Levin. *The Future of Soviet-North Korean Relations*. Santa Monica: Rand, 1984.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93).
- Koh, Byung Chul.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9.
-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hin, Rinn S. and Robert G. Sutter.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20, 1994).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Tarnoff, Curt. *Conditions on U.S. Foreign Assistance to Russia*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26, 1995).
- 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DPRK: Assessment of Damage and Immediate Relief Requirements following Floods* (September 12, 1995).
-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 Wilborn, Thomas L. *Japan's Self-Defense Forces: What Dangers to Northeast Asia?*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1994.

2. 論文

-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화정책.”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吳承烈.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民族統一研究院. 「金正日 政權의 向方」 (제18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11.8).
- 이정식. “공존과 혁명과 통일논의.”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Brzezinski, Zbigniew.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256 (Winter 1991/92).
- Christopher, Warren. “America’s Leadership, America’s Opportunity.” *Foreign Policy*. no. 98 (Spring 1995).
-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XXXV, no. 6 (June 1995).
- Kihl, Young Whan. “North Korea’s New Pragmatism.” *Current History*. vol. 85, no. 510 (April 1986).
- Kim, Nam-Sik.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An Analysis of the Sixth Congress of the KWP.”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

- no. 1 (Spring/Summer 1982).
- Kim, Samuel S. "North Korea in 1994: Brinkmanship, Breakdown, and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XXXV, no. 1 (January 1995).
- _____. "Pyongyang, the Third World, and Global Politics." *Korea & World Affairs*. vol. 3, no. 4 (Winter 1979).
- Koh, B. C.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IX, no. 4 (April 1969).
- Lee, Chong-Sik. "New Paths for North Korea."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VI, no. 2 (March/April 1977).
- _____. "The Impact of the Sino-American Detente on Korea." in Gene T. Hisao, ed. *Sino-American Deten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Praeger, 1974.
- Lee, Hy-Sang.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 no. 12 (December 1988).
- Macdonald, Donald S.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 Mack, Andrew.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XXXIII, no. 4 (April 1993).

Nye, Joseph S.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_____.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Shinn, Rinn-Sup. “Foreign and Reunification Policies.”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I (January/February 1973).

Xin Dun, “China’s Economic Strength Is Overestimated.” *Beijing Review* (June 14~20, 1993).

3. 其他

「근로자」.

「内外通信」.

「로동신문」.

「사회과학」.

「월간 북한동향」.

South China Morning Post.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 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